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58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3.

발 의 자 : 정동만 · 송언석 · 엄태영
진종오 · 김형동 · 김선교
박형수 · 김태호 · 김종양
김상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·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이의 근거가 된 「공직선거법」 관련 조항의 위헌 판결(2018헌마456 등 병합)에 따라 「주민등록법」 해당 조항의 삭제가 필요함

또한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, 현행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,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주요내용

가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‘인터넷 실명제’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

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 (안 제35조제1호)

나.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
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 (안 제35조제4호)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9841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 제목 “(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)”을 “(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”를 “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”로, “필요한”을 “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5호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. 이때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29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19841호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</p> <p>제35조(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)</p> <p>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.</p> <p>1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·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/p> <p>2.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</p> <p>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법률 제19841호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</p> <p>제35조(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.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2.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-----</p> <p>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5호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. 이 때 진위 확인</p>

	<u>이 필요한 경우는 제29조제2</u> <u>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</u> <u>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</u> <u>또는 등·초본의 교부를 신청</u> <u>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</u>
--	--